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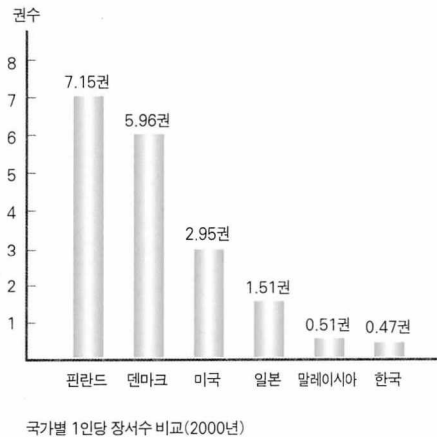
정부의 공공 도서관 예산 삭감 방침으로 파장 커져

도서관 정보화보다는 책 지원 늘려야

정부가 도서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출판계와 문화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7월 문화관광부가 2002년도 예산 1조 6천억원에 대한 1차 심의를 통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방문화육성지원비 등 여러 항목을 삭감대상으로 정했다. 문화관광부가 도서관과 관련해 증액을 요구한 항목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50억원(올해 50억원)과 공공도서관 건립비 1백억원(올해 65억원),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 2억 5천만원(신규) 등인데, 이 가운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분은 전액 삭감, 공공도서관 건립비 증액분은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서관 예산을 포함해서 문화예산이 30% 정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 전체 예산 중 문화예산 1%'의 정책 기조도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자료구입비, 하버드대에도 못 미쳐

이에 대해 (사)한국민족예술인연합회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도서관콘텐츠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등 5개 단체는 지난 7월 18일 성명을 내고, "문화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이 도서관콘텐츠 확충, 지역 문화 진흥, 영화진흥 등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더 큰 혼란과 분노로 몰아넣는다"면서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사회가 도서관 콘텐츠 확충 없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묻고, "정부는 문화예산 삭감방침을 철회하고, 문화예산을 증액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 "문화예산을 삭감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정부의 문화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도서관 예산 삭감과 관련해 도서관콘텐츠확충과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의 유명숙 사무국장은 "공공도서관은 서민들이 지식과 정보를 접하는 통로이자 국가경쟁력의 척도"라며 "공공도서관을 정부정책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관료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전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정부 지원금은 1997년 10억원에 그쳤지만 2001년 50억원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단체 부담분까지 합하면 2백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1999년 미국 하버드대 도서관 자료구입예산인 275억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국립도서관을 포함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는 403개. '국민운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의 6배인 2,585개, 독일은 15배인 6,313개, 미국은 8,946개다. 인구대비로 따진다면 핀란드는 3천2백명에 공공도서관 1개, 독일은 4백명, 덴마크는 4만6천명, 미국은 2만6천명 그리고 우리는 11만5천명

에 1개 꼴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 논리로 문화 판단하는 것이 문제"

우리나라 인구 대비 도서관 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서울의 일부 지역은 인구 1백만명 이상의 밀집지역에 공공도서관이 하나뿐인 경우도 있다.

정부는 1991년부터 1999년 사이 620억원을 투입해 199개의 공공도서관을 새로 건립했고 2000년에는 64억원으로 11개소, 2001년에 86억원으로 18개소를 새로 세웠다. 또한 정부는 2011년까지 공공도서관 수를 75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정보화에만 매달려 정작 기본 콘텐츠인 책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는 것이다.

공공도서관 1인당 장서수를 보면 1위인 핀란드가 7.15권, 덴마크는 5.96권, 미국은 2.95권, 일본은 2.56권인데 비해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0.51권보다도 적은 0.47권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양서 한권이 출간될 경우 3천원 이상씩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게 출판계의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 학술서적의 경우 초판인쇄부수가 5백권에서 1천권 정도에 불과하고 이같은 분량이 완전히 판매되기도 힘든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처럼 일만수요가 많지 않은 인문서 출판시장을 안정시키려면 3천원 이상은 도서관이 구입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려면 공공도서관 연간 자료구입비는 4백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

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회 한철희 위원장은 "예산을 늘려가도 시원찮은 판에 그마저 삭감한다면 국민정부의 문화정책이 퇴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도서관협회 이용훈 기획부장은 "여러 채널을 통해 이번 예산삭감방침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경제 논리로 문화를 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장근기자